

## 2. 정부 정책 동향 (6. 19~6. 29)

금융감독위원회(6.19): 기업 구조조정 협약 운영	- 작년에 시행된 부도유예협약을 개편한 것으로,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회에 들어간 부실 징후 기업은 최소 1개월간 부도 처리가 면제
재정경제부(6.21): 외환거래법안 입법 예고	- 99년 4월부터 '외환정보센터'가 설치돼 개인, 기업, 금융기관 등의 모든 외환 거래 내용을 실명으로 등록
기획예산위원회(6.21): 민영화 대상 공기업 확정	- 포철, 한전, 한국통신 등 9개 공기업을 민영화 결정 -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종업원 지주제, 국민주 제도 도입
공정거래위원회(6.22):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	- 5대 대기업 집단의 40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직권 조사하여, 금융감독위원회의 2차 퇴출기업 판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
재정경제부(6.23): 경기 활성화 위해 재정자금 추가 투입	- 신용 경색 해소와 실업 대책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 - 이를 위해 IMF와 협의한 재정수지 적자폭을 1.7%에서 3%로 확대할 방침
산업자원부(6.24):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8월 시행	- 부실기업을 사서 경영개선 후 되파는 '구조조정전문회사'의 설립을 지원하고, 지주회사의 기능도 부여 - 산업정책 자금이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활용
국세청(6.25): 아파트 기준시가 하향조정	- 양도소득세, 상속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15년만에 평균 11.3% 인하, 고시
세계발전심의위원회(6.26): 음성·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마련	- 기업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손비로 인정 -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자료 제출이 의무화
경제장관회의(6.28): 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	- 기업 및 은행 퇴출에 따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, 기업어음, 회사채 지급보증을 만기 연장
금융감독위원회(6.29): 5개 은행 퇴출 발표	- BIS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한 은행중 동화, 경기 등 5개 은행의 퇴출이 결정되어, 주택, 한미은행 등이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 - 조흥, 상업 등 7개 은행은 조건부로 승인받고, 추가정상화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함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